

탄소배출권 관련사업 활성화된다!

2015년 거래제도 도입으로 ... 거래전문가 육성에 녹색금융도 대두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배출권 거래를 담당할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국내에 처음 개설된다.

탄소금융은 녹색금융 분야의 새로운 유망직종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늦어도 2014년 말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는 등 배출권 관련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30%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확정했고, 9월부터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포스코, 한국전력 등 471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기업별로 감축목표 할당에 들어갔다.

2012년에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에 따른 탄소배출감축 강제규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감축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명단까지 공개한다.

정부 계획이 구체화하면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투·융자를 비롯해 청산·결제지원·중개·신용보증·신탁·컨설팅 등 탄소시장과 연관된 사업기회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탄소배출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간접적으로 줄이는 탄소오프셋형 예금·대출·펀드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들의 국외 진출이나 인수·합병(M&A) 움직임에 따른 금융수요 역시 주목되고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탄소금융시장 활성화에 대비해 <제1차 탄소금융전문가과정>을 개설해 탄소시장 분석, 탄소금융상품과 사례 분석 등 현장중심 교육을 10월17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탄소금융 박순철 수석연구원은 “탄소금융 시장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활성화돼 있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면서 “탄소배출권 투자 사업은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2015년 거래제 도입을 가정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금융 분야는 대동단계로, 신한금융투자가 탄소배출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담보부증권(CBO)을 최근 발행한 것이 탄소배출권을 유동화한 첫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전문기업도 한국탄소금융이 유일한데, 한국투자증권과 KT&G, 후성, 휴켄스 등이 공동으로 출자해 2008년 설립됐으며 탄소배출권 매매와 중개, CDM 사업 개발과 투자, 탄소시장 리서치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27>